

정책은 기반이 약한 것으로 밝혀질 수 있다.(Mr.Kim's economic policy, to be sure, may prove to be unfounded)"고 되어 있다. 그러나 "그는 자금시장의 혼란과 한국 주요기업들의 연속되는 도산 때문에 IMF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거대한 압력에 직면해 있다(He is under enormous pressure to please investors and the IMF because of the chaos in the financial markets and the continuing bankruptcies of major Korean companies.)"라는 문장이 이어진다. 바로 뒷 문장이 '기반이 취약한(unfounded)'이라는 앞 단어의 객관적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김 당선자의 경제정책은 근거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원문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이다. 더군다나 'may'를 무시한 채 '근거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도 무리다.

기자협회보 9월 28일자에 따르면 『조선일보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주필이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용한 것 같다"며 AWSJ 22일자 관련 기사를 제시했다』고 해명하면서 관련 기사를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직접 검토해 본 결과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와 내용상 차이는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김 주필 칼럼에서 "미국의 언론들은...미국 월가의 교과서나 다름없는 이 신문"이라고 분명히 밝히지 않았는가. 따라서 홍콩에서 발행되는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용했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김 주필은 칼럼초반에서 "미국의 언론들은 김대중 당선자를 아직도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지는 12월 21일자 사설에서 "그는 가장 어려운 시절에 대통령이 됐지만 작금의 위기는 그가 한국의 예비지도자들중 가장 잘 준비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을 기회가 될 것이다"(Now he has won the prize at a most difficult time but the crisis is one for which he may be best prepared of Korea's potential leaders)라며 김 당선자를 높이 평가했다. 뉴욕타임즈 역시 19일자 사설에서 "구제금융조건에 대한 그의 비판은 전적으로 그른 것이 아니다. 이번 선거는 IMF가 잘못된 결정(mistake)들이 해악을 끼치기 전에 이를 바로잡는 기회다. (His criticism of the bailout terms, however, is not wholly wrong. The election provides an opportunity for the fund to correct its mistakes before they do harm)"라고 주장해 당시 김대중 당선자의 재협상 발언과 관련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것만 보아도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언론을 '미국언론'으로 일반화한 김 주필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다.

2. "못 믿겠다"를 "조선일보 대서특필"로 자랑

- 황장엽 논문 외신 관련 보도(97년 4월 25일) -

조선일보는 북한 관련보도에서 종종 특종을 낸다. 그러나 나중에 그 가운데 적지 않은 기사가 오보와 왜곡임이 밝혀졌다. 때로는 오보나 왜곡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 외신에서까지 그 문체점을 지적할 정도.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러한 외신의 비판적 문제제기마저 뒤집어 마치 외신에서 조선일보의 특종을 크게 보도한 것처럼 또다시 왜곡하는 적반하장식 용기를 발휘했다. 황장엽 논문 관련

보도가 대표적인 사례.

조선일보는 97년 4월 22일자 1면에 황장엽씨 논문을 인용하여 "북 핵-화학-로켓무기로 남한 초토화 할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머리에 올렸다. 조선일보는 이어 4월 25자 2면에 박스 기사로 <각국언론들 「황장엽 논문」 보도/모두 조선일보 인용...核-日공격 계획등 언급>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의 제목으로 보면 마치 외국언론이 황장엽 논문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를 기정사실화해 비중있게 인용보도한 것처럼 보인다. 기사의 시작도 "『조선일보에 따르면...』 미국의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등 세계 주요언론들이 조선일보를 일제히 인용,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논문 『조선문제』를 대서특필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어지는 기사내용을 보면 조금 의아해 진다. 조선일보 스스로 "그러나 황씨의 발언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밝힌 뒤에 워싱턴 포스트지와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예로 들었다. 조선일보가 자신들의 보도를 인용했다고 한 세 신문의 기사를 실제로 모니터팀이 확인해 본 결과 황장엽 논문의 신빙성과 이에 대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일보는 솔직하게 외신들이 '유보적인 자세'를 보인것인 아니라 '믿지 못했다'고 기술해야 하지 않을까

우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의 보도에는 조선일보 기사와는 달리 "조선일보에 의하면"이라는 인용구가 전혀 없다. 'Chosunilbo'는 커녕 'The Newspaper'라는 단어조차 없었다. 다만 첫 문단에서 "남한의 안기부가 어제 밝혔다"(South Korea's intelligence agency said yesterday)라고만 돼 있다. 도리어 이 신문은 4월 23일자에서 "황씨는 자신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증거도 제공하지 못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Experts cautioned that Hwang had offered no proof of what he asserted ...)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 신문은 "나는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I wouldn't take it as gospel)"와 "황씨가 그런류의 정보를 얻을 위치에 있는지 확인이 서지 않는다"는 서방 특파원의 발언은 인용 보도했다.

같은 날 뉴욕타임즈도 비슷한 문제제기를 했다. 이 신문은 "한국전문가들은 그것을 해석하는데 신중할 것을 충고했다. 그들은 논문이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고 논문의 작성배경이나 환경 또한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But experts on Korea advised caution in interpreting it. They said that the essay was short on details and that very little was known about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it was written)고 보도했다. 또 "북한의 전반적 상황에 대해 기술한 장문의 논문에서 (북한군의) 무기(군사력)에 대한 언급은 단지 두서너 문장에 불과하다(And the remarks about the weapons constituted just a couple of sentences in a long essay about the overall situation in North Korea)"는 점도 밝히고 있다. 이 지적이 사실이라면, 조선일보는 논문을 인용하면서 특정 부분을 부풀려 전체를 왜곡한 셈이 된다.

한편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지는 조선일보와 안기부의 컨텍스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바로 "조선일보는 남한의 안기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논문을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The newspaper, which is known to have close contacts with South Korean intelligence did not say how it obtained the essay)"는 대목이 바로 그것이다. 워싱턴 포스트 역시 "일부 관계자들은 황장엽씨가 과연 보안이 철저한 군사관련 정보에 접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스러워하고 있다.(some wondered if he was privy to the most secret military matters in Pyongyang)”면서 “조선일보는 이 보고서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포스트는 “몇몇 사람들은 심지어 황씨의 망명이 북한에 의해 꾸며진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결국 조선일보가 예로 든 외국 언론 모두 황씨 논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논문 입수경위와 안기부와의 커넥션에 강한 의혹을 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시치미를 뚝 떼며 “모두 조선일보 인용”이라고 자랑한 것이다. 과연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조선일보는 왜 자신들의 보도를 비판한 외신을 이렇게 거꾸로 보도했을까. 결국 기사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제목을 다는 방법으로 독자를 기만하려 한 게 아니냐는 분석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3. ‘악의적 왜곡’에 ‘작문’까지

조선일보는 지난 2월 12일, 『민노총 ‘총파업선언’ 외국언론 반응 - “한국 또다시 시험대 올라”』 라는 기사에서

미국과 일본 홍콩 등 외국언론의 기사를 인용보도했다. 이 중 월 스트리트저널의 기사를 인용한 부분을 보자. 조선일보는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지는 민노총의 14일 총파업 요구와 관련, 「개혁을 향한 한국의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보여준다」 며...”라고 쓰고 있다.

그러나 2월 11일자 월 스트리트 저널에는 “(노사정위원회의 협상갈등과 정치권의 재협상 거부로 조성된) 이러한 대치국면은 개혁을 향한 한국의 행보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를 보여주었다(The confrontation showed how precarious Korea’s steps toward reform still are)”고 되어 있다. 조선일보가 ‘총파업이 개혁을 위태롭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한 부분이 월 스트리트의 원문에는 ‘노사정 대치국면으로 개혁행보가 조심스럽다’고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조선일보는 원문에 없는 내용도 인용하는 ‘초월적 독해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월 스트리트 저널이 ①“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노동계와 기존 유대관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뒤 이어 ②“과거 노동계가 노동관련 개혁을 무산시킨 일이 있지만, 현재 경제전문가들은 노동개혁이 필연적이라고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월 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보면 ②의 내용은 ①의 내용 뒤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기사 원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결국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왜곡이자 작문이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9. KBS가 방영 미룬 조선일보 문제들

월간 「말」 정지환 기자

「말」이 ‘조선일보 문제’를 쓰는 까닭

국민은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한다. 언론이 그 존재이유를 의심없이 인정받고 있는 것도 국민의 알 권리를 대리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면서 때론 취재에 응하기 꺼려하는 뉴스인물들의 이야기를 솔하게 써왔다. 「말」도 그랬고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요즘 조선일보가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KBS의 개혁실천팀이 제작중인 「이제는 말한다」의 조선일보편이 그것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조선일보 사주인 방씨 일가가 뉴스인물로 떠오른 것이다. 국민들은 왜 공영방송 KBS가 조선일보 소유주인 방씨 일가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했고 왜 한국사회의 공기(公器) 조선일보가 그것을 꺼려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한다.

「말」은 국민의 그런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KBS가 취재한 조선일보 문제’를 취재해 여기 중계한다. 「말」은 KBS가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취재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선일보 사주측에 몇 가지 사실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조선일보측의 답은 “질의내용 자체가 사실과 무관하고 명예훼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갈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 였다.

이러한 조선일보측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말」이 이 기사를 실는 이유는 조선일보와 방씨 일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리란 믿음 때문이다. 나아가 조선일보 사주는 일개 개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사실보도는 그것이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명예를 실추할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일부 판례를 방씨 일가에게 적용하는 것은 그들을 모욕하는 처사다. 발행부수 1위를 달리는 신문사의 사주가 소심하게 그런 범우산에 몸을 가려 국민의 알 권리를 막으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상이다.

상식 중의 상식은 ‘신문은 사회의 공기(公器)다’는 말이다. 이희승 박사가 감수한 국어사전(민중서림)은 공기의 뜻을 “(1) 공중의 물건 (2) 공공기관을 개인의 사유가 아니라는 뜻으로 이르는 말”이라 풀이하고, 그 예로 “신문은 사회의 공기다”라고 적고 있다. 신문이 공기일진대 그 신문의 사주 또한 공인으로 대접받아 마땅하다.

「말」은 한국사회의 공기인 조선일보와 그 사주 방씨 일가 이야기를 국민의 알 권리에 따라 보도한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발행부수 1위 신문사로 공기 중의 공기인 조선일보의 사주들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 그들에 대한 도덕성을 검증해 본 적이 없다. 조선일보는 정치인과 공무원은 물론 한국사회의 지도층 인사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솔하게 해왔지만 그들보다 더한 지도층 인사인 자신의 사주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 다른 언론들도 ‘살아 있는

성역'인 조선일보 사주에 대한 '건강검진'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말」이 나왔다. 우리는 사실만 다뤘다. 조선일보는 우리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지만 반론의 장은 다음 호에도 열마든지 열려 있음을 밝혀둔다. (편집국)

1. 방씨 일가의 토지 위장편법소유 의혹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는 현지인.

그러나 코리아나호텔로 가등기된 조선일보 사주 방씨 일가의 호화별장.

KBS취재진과 본지 기자가 확인한 토지위장편법소유의 증인과 증거들.

4월 중순, KBS 헬기 한 대가 여의도에서 이륙, 경기도 가평으로 향했다. 개혁실천 프로그램 「이제는 말한다」의 취재진을 실은 헬기였다. KBS헬기는 청평호수 상공에 이르자 한동안 머물며 한 호화별장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고성리 177-2.

청평호반에 자리한 그 땅에는 한 채의 그림같은 별장이 있었다. 단층 슬라브 건물로 이뤄진 별장은 정원수와 잔디밭으로 둘러싸여 있고 울타리는 호수까지 죽 이어져 있었다. 별장 정면에서 볼 때 1백여m쯤 떨어진 호숫가에는 지붕이 있는 보트 선착장도 보였다. 두 대의 모터보트가 매여진.

등기부등본상 별장의 소유자는 현지인

KBS 취재진은 지상으로 내려와 인근 주민들을 인터뷰했다. (현지 주민이나 관련자의 대화 내용은 KBS 취재진이 카메라로 녹화한 것을 기초로 했다.) 주민들은 이 별장을 조선일보 사주의 별장으로 알고 있었다. 그들은 방우영 조선일보 회장이나 방용훈 조선일보 이사 겸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이 별장에 내려오는 것을 봤다고 KBS 취재진에게 증언했다. 특히 방용훈 사장의 모습이 자주 보였다고 했다. (지금부터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방일영, 방우영, 방상훈, 방용훈, 방성훈, 방준오씨 등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의 '방씨 일가의 가계도' 참조.) 그러나 이 별장 일대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KBS와 본지 기자가 확인한 결과 소유주는 방우영이나 방용훈으로 나오지 않았다. (별장이 들어서 있는 177-2번지를 에워싸고 여러 필지의 토지가 있다.) 소유주는 김택중, 김명중, 윤규준 등 3인으로 나왔다. 그런데 윤규준 명의의 소유로 되어 있는 6필지의 토지에는 조선일보 계열사인 코리아나호텔 명의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 3인은 과연 누구인가. 차례로 살펴보자.

주민들이 KBS 취재진에게 한 증언에 의하면 부자지간인 김택중(75) 김명중씨(41)가 외서면 고성리 87번지로 이사온 것은 85년이라고 한다. 김택중씨는 이사온 이듬해인 86년 현재의 별장이 소재한 177-2번지 일대의 땅을 매입했다. 그리고 김씨가 가평군청에서 주택 신축허가를 받은 것은 89년. 바로 이 때 코리아나호텔이 등장한다.

“맨 처음에는 농가를 지을 요량으로 신축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신축 단계에서 코리아나호텔측이 땅을 팔라고 했다.” KBS 취재진에게 털어놓은 김택중씨의 말이다. 아무튼 코리아나호텔은 김씨의 주택을 89년 10월 15일부터 99년까지 10년 동안 3천만원에 전세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맺었다. 주택 전세의 목적은 코리아나호텔 사원 교육장이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전세권은 93년 해지되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김택중씨는 전세권 설정에 대해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땅을 팔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KBS 취재진과 김씨가 나누는 대화의 요지.

—명의를 안 넘겼다.

“(코리아나호텔이) 왜 명의를 안 가져가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명의를 넘여가지 않았다면 당신에게 세금이 나올 것 아닌가.

“그 쪽(코리아나호텔)에서 내렸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김택중씨는 어떻게 토지를 구입할 수 있었을까. 주변 농민들은 “김씨 부자가 이곳에 처음 올 때만 해도 땅을 살만큼 재력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KBS 취재진이 토지 매입자금을 어디서 구했냐고 묻자 김씨는 “통일교측에서 이양기를 사라고 준 1백50만원으로 땅을 샀다”고 대답했다. (주민들은 실제로 주변의 많은 땅이 통일교측의 소유라고 증언했다. 방용모 조선일보 전 사주의 장남으로 현조선일보 사주와 재산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방재선씨는 “문선명 통일교교주와 방우영 조선일보 회장이 평북 정주소학교 동창”이라며 통일교—조선일보의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대리인 세우고도 가등기 설정한 이유

한편 문제의 별장 주소지로 의문의 인물인 윤규준씨(53)가 91~93년경 전입해 왔다. 이 마을 이장은 그가 7년전에 이곳으로 내려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토지대장을 보니 윤씨가 온 뒤 별장 주변의 땅이 그의 명의로 넘어갔다. 예컨대 김택중씨의 일부 땅이 96년 12월 19일 윤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으며 이보다 앞선 96년 8월 30일에는 별장도 윤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에서 그대로 확인됐다.

김택중씨가 KBS 취재진에게 한 다음과 같은 말은 방용훈—윤규준—김택중의 관계를 어렵게 하거나 암시해 준다. “윤씨가 내려오기 전에는 방용훈 사장으로부터 별장을 관리해 준 대가로 매달 30~40만원의 돈을 받았으며 2년이 지난 뒤부터는 60만원을 받았다. 재산세와 토지세 1백여만원은 방 사장이 대신 내주고 있다. 당시 세금고지서가 나오면 현지 관리인인 윤규준에게 가져다주었다.” 다음은 KBS 개혁실천팀 김동렬 PD와 김택중씨의 대화내용이다.

—별장 주인이 누구냐.

“방용훈 사장이다.”

—윤규준씨는 누구인가.

“그 사람은 별장 관리인이다.”

그렇다면 윤규준씨의 정체는 무엇인가. 방재선씨는 “윤씨는 서울에서 전세를 살던 사람”이라면서 “그는 땅을 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윤씨가 이곳으로 오기 전까지 그의 주소지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으로 되어 있었다. 윤씨의 부인과 자녀들은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으며 윤씨도 가끔 서울 집을 간다고 한다.

그런데 본지 기자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다. 윤규준씨가 방용훈 사장의 이종사촌(방일영 고문의 처조카)으로 밝혀진 것이다.

방재선씨는 윤씨가 방용훈 사장 등 조선일보 사주의 별장을 관리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현지인이 아니면 농지를 살 수 없다는 점을 피하기 위해 윤씨를 내려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주장은 기사가 입수한 토지대장을 볼 때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 이 서류 중 일부에는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전은 밭(田)을 의미한다. 별장 부지 중 일부가 농지였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방용훈 사장은 왜 대리인을 내세워 별장과 땅을 소유하고도 코리아나호텔이라는 법인체를 통해 가등기를 설정해 놓은 것일까. 방재선씨는 “대리인조차 완전히 믿지 못해 그렇게 한 것”이라면서 “그것은 동시에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사 공금을 유용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즉 조선일보 사주 일가들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별장을 법인체의 이름으로 가등기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토지 편법소유는 일부 ‘돈 가진 일반인’들도 ‘애용’ 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바르게 살기’를 선도해야 할 언론사의 사주가 그런 의혹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방씨 호화분묘 보도하지 않은 조선일보

이런 수법은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 화접리 일대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이 지역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KBS 취재진과 본지 기자가 확인해 보니 방용훈 사장 외에도 여러 명이 소유주로 나와 있었다. 윤규달, 정호영, 서종호, 서병기, 정구효 등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누구인가. 이 중에서 윤규달씨가 윤규준씨의 동생(방용훈 사장의 이종사촌)이라는 것이 한 익명의 코리아나호텔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드러났다. 다음은 본지 기자와 방재선씨의 일문일답.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이용하고 있는 별장은 또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청평별장을 비롯해 남애별장, 의정부별장, 제주별장 등 4곳이다.”

—제일 자주 이용하는 별장은 어느 곳인가.

“특히 강원도 양양군 남애면에 소재한 남애별장은 방일영 고문의 개인별장과 다름없다.” 실제로 KBS 개혁실천팀은 4월 15일경 취재중에 마침 남애별장에 내려와 있는 방일영 고문을 맞닥뜨리고 그를 카메라에 잡아냈다. 흥미로운 것은 남애별장 입구의 간판에도 코리아나호텔 사원 휴양소라고 적혀 있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근본적인 하나의 의문이 생긴다. 왜 조선일보 사주인 방씨 일가는 자신들이 실제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세금까지 내면서 별장의 소유권자로 대리인을 내세우고 있는가. 어떤 뜻이든 못한 점이라도 있었던 것일까. 이에 대한 방재선씨의 분석이다.

“사회적 강자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의 사주로서 호화별장 소유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제기될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조선일보가 다른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호화사치생활 등에 대해서는 도덕성을 외치며 가차없이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그런 편법소유는 위선적이고 부도덕하다.” 실제로 조선일보의 자기 잘못 덮어 버리기 전력은 이런 예에서 나타난다. 보건사회부는 92년 5월 25일 불법적인 호화분묘를 조성한 사회지도층 인사 91명을 공개한 적이 있다. 방일영 당시 조선일보 회장도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 사실을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보다 앞선 89년 6월 8일 방용훈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이자 방일영 고문의 손자인 방준오군(당시 15세)이 서울시가 부과한 토지분 재산세 고액납세자 6위에 오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6월 9일자에 이 사실을 작게 취급하면서 납세자 명단을 5위까지만 소개하였다.

본지 기자는 방일영 조선일보 고문, 방우영 회장,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앞으로 별장현황과 소유형태에 대한 질의서를 5월 15일 보내 24시간내에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응답을 받을 수 없었다.

‘밤의 대통령’의 두 얼굴-권언유착설과 카지노연관설불의와 타협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 오늘날까지 여러 차례에 걸친 정치적 변혁을 통하여 그때마다 표현의 자유를 억제당했을망정 우리 신문사는 언론의 정도를 벗어나부정이나 이권과 타협하여 실리를 취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방우영 회장의 조선일보에 대한 자평이다. 그렇다면 방우영 회장이 「조선일보와 45년」에서 털어놓은 다음과 같은 ‘고백’들도 언론의 정도를 걸은 것인가. 그는 이 책에서 포항에서 석유가 나왔다고 해서 세상이 떠들석했을 때 벌어졌던 삽화를 소개했다. 당시 신문사 사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병에 든 석유의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고 난 후 사장들에게 돌렸다고 한다.

“제각기 안을 들여다보며 머리를 끄덕이는 가운데 내 차례가 왔다. 지난날 구닥다리 지프차를 몰고 다닐 때 고장이 났다 하면 으레 입으로 휘발유를 빨아 올리곤 해서 독특한 냄새를 맡은 경험이 있어 병에 든 액체를 손가락에 찍어 맛(?)보았다. 그저 남과 다른 모션을 해 본 것뿐이다. 이 행동을 보고 있던 박 대통령이 사뭇 만족스럽다는 표정으로 ‘어때 진짜냄새가 나는가’고 물기에 내친 김에 ‘정말 진짜 같다’고 대답했다. 며칠후 김성진 문공부 장관이 전화를 걸어 와 1년 가까이 보류했던 윤전기 도입을 대통령이 결재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그의 이런 순발력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요정정치 바람에 일찍이 역대 권력자들과 어울리면서 대접도 받고 교분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그의 다음 토로를 들어보자.

“선우연 부장은 선우휘 주필의 동생으로 그 당시 의신부장으로 있던 조광묵과 나의 중학교 동기다. ‘청와대 비서 내락을 받았으니 발령 전에 잠깐 동안 부장 직함을 씌워 달라’는 주필의 요청으로 3개월 동안 근무하고 청와대에 들어갔다 전국구 의원이 됐다.” 신문사 부장자리가 청와대 비서로 가기 위한 체면용 자리라도 되는 것인가. 조선일보는 박정희정권의 실

력자에게 정권연장의 비책을 훈수(?)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부산 유세를 앞두고 이후락 썰장이 본사를 찾아와 환담중에 ‘결정적 묘안이 없느냐’ 고 물었다. 이때 최석채 주필이 ‘3선만 하고는 더 이상은 안 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약을 하라’ 고 말해 주었다. 그래서인지 박 대통령은 부산 유세에서 처음으로 국민 앞에서 ‘이번만 하

고는 다시는 여러분께 표를 달라고 하지 않겠다’ 고 말했다.” 방우영 회장은 전두환과 거래한 대차대조표(?)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밀지는 거래를 했다고 엄살을 떨더니만 나중에는 도리어 이익을 보게 되었으니 다행이라는 투로 말했다.

“12 12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요청으로 그를 만났다. 이미 수인사를 거친 사이라 서먹하지는 않았다. 추탕을 먹으면서 12 12사건의 경위를 장황하게 해명한 다음 정색을 하고 ‘국방헌금’ 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언뜻 무슨 뜻인지 몰라 긴장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지금의 정동 별관과 한양빌딩 사이에 있는 보안사 안가를 탄 곳으로 옮기려 하니 ‘국방헌금’ 을 내는 셈 잡고 신문사가 인수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가격까지 제시했다. 생각해 보자고 답변하고 사에 돌아와 챙겨보니 박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가 끌려와 조사를 받은 장소였다. 수차례의 교섭 끝에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인수했는데 결국 그 집을 매수함으로써 오늘의 정동별관을 짓는 계기가 됐으니 새옹득실이라 할 수 있다.” 방우영 회장은 공과 사를 일치시키는 수완에도 뛰어났다. 자유당시절 조선일보의 용자 알선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재무부 이열모 이재국장을 조선일보 상무로 영입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능력과 도움에 보답코자’ 라는 것이 방 회장이 밝힌 영입의 이유였다. 특정 언론사의 용자 알선을 위해 백방으로 뛰는 재무부 이재국장이나 그 도움에 대한 보답으로 그를 언론사의 임원으로 영입하는 신문사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할까.

방우영 회장은 직원들의 이권을 챙겨주는 데도 일가견이 있었고 그것을 지금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가관인 것은 운수부에 있다가 퇴직한 사원들에게 하늘의 별따기라는 개인택시 면허를 얻어주기 위해 사회부까지 동원했다는 점이다. 사회부라면 주로 경찰서를 출입하는 기자들일텐데 일종의 이권개입에 사회부를 동원한 것을 그는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을까.

방우영 회장은 자신의 형인 방일영 고문의 인물됨에 대해 “외견상 대인다운 풍모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걸쳐 치밀하며 정과 사의 가름이 분명해 의롭지 않은 일과 타협에 가까이 가지 않는 정도로의 행보를 시종일관 지속해 오고 있다” 고 평한 바 있다.

그런데 언론의 정도를 걷는다는 방일영 고문은 언론과는 무관한 카지노연관설의 한 주인공이 되고 있다. (방재선씨는 ‘카지노계의 숨은 대부’ 라는 표현을 썼다). 누구라도 일종의 오락 사업인 카지노와 연관되지 말란 법은 없다. 그러나 사회적 공기인 언론사의 사주가 언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카지노와 연관된 것도 그리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다. 본지가 조선일보 사주측에 보낸 질의서에서도 이를 물었으나 답변은 없었다. 방재선씨가 KBS 취재진과 본지 기자에게 한 말을 들어보자.

“방일영 고문은 작고한 선경 창업주 최종건 회장, 현 최종현 회장(그는 지금 조선일보의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파라다이스 전낙원 회장, 인천올림픽퍼스호텔 카지노 유화열 회장 등

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특히 전낙원 회장과 방 고문의 관계는 친형제를 초월할 정도다.” —얼마나 친하다는 것인가.

“전낙원 회장이 구속될 것을 염려해 입국하지 못하고 해외를 떠도느라 평소 친형같이 모시던 방 고문의 칠순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 아마 94년이었을 것이다. 전 회장은 방일영 고문과 방우영 회장 등 조선일보 사주의 직계 가족들을 동경으로 초청하여 성대한 칠순잔치를 베풀어주었다.”

—방일영 고문과 유화열 회장과는 어떤 사이인가.

“유화열 회장이 문민정부 들어 슬롯머신 사건의 불똥을 맞고 몇 개월간 옥고를 치른 적이 있다. 방일영 고문은 유 회장이 출옥하자 자택으로 그를 불러 위로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는가.

“그날 흑석동 방일영 고문 자택에 직접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유화열회장과 악수까지 나누며 인사를 했다. 직접 목격했던 것이기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몇 년 전에 방일영 고문과 방우영 회장이 전낙원 회장의 초청으로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카지노호텔도 방문한 적이 있다. 이런 사례를 보았을 때 세간에 떠도는 방일영 고문의 카지노 연관설이 전혀 낭설만은 아닐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물론 대통령도 만들 수 있는 신문사의 사주라는 현실로 볼 때 영원히 숨겨진 비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러나 나는 내가 본 것만을 말할 뿐이다. 모든 판단은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몫으로 돌리고 싶다.”

방재선씨는 이런 말도 덧붙였다. “미국에서 뉴욕타임즈나 워싱턴포스트 사장이 마피아와 연계되어 있다면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 최대의 일간지 사주가 카지노와 연관돼 있다는 그 풍문 자체가 도덕성이 요구되는 언론사의 사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 아닌가.”

10. 허위왜곡 보도, 언론자유 꺾질쓰고 개인의 명예권 침해

주동황 (광운대 신방과 교수)

최근 조선일보 사태에 대한 글을 써달라는 대학신문사의 주문을 받으면서 나는 이 문제가 대학사회에도 민감한 반응과 파문을 몰고 오지 않을까 하면서 내심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서 이 사태의 전말과 관련 보도내용, 각종 논점들을 자세히 거론하고 분석해야 하겠지만 한정된 지면 속에서 나의 의견과 주장만을 중점적으로 담을 수밖에 없다.



월간조선이 최장집 교수의 한국전쟁관을 검증하겠다고 나서고 조선일보가 이 문제를 집요하게 끌고 나가면서 사태는 민감한 사상논쟁으로 급격히 확산되었다. 지난주 법원의 월간조선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서 조선일보 사태는 다시 언론보도의 제한문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그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조선일보 사태는 한편으로 좌파나 우파나 하는 식의 식상한 사상논쟁으로 비취질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밑바닥에는 언론의 검증 역할, 허위왜곡보도와 개인 명예권 침해 등 복잡미묘한 논란과 쟁점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 그런데 이런 쟁점들이 오히려 조선일보에 의하여 교묘히 포장된 채 선전되어 독자들에게 오인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점이다.

첫째, 조선일보는 마치 공인에 대한 언론의 검증 기능 자체가 공격받은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언론의 이런 검증기능과 공적토론프로세스를 부인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는 우리 현실에서 언론이 그런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사상검증'이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자신을 마치 종교재판소나 헌법재판소 같은 공적 제도적 기관으로 자처하고 나선 것은 분명 지나친 태도이고 오해를 받을 만하다. 그리고 과거 군사정권에서 수많은 사건과 문제에 대하여 언론으로서의 검증 역할을 전혀 도의시해온 조선일보가 이런 돌연한 주장과 함께 마치 거대한 국가기관처럼 나서는데 그 저의를 의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심리적 반응이다. 이런 점에서 조선일보가 부닥친 비난과 저항은 마땅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둘째, 공인에 대한 검증 보도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와 논평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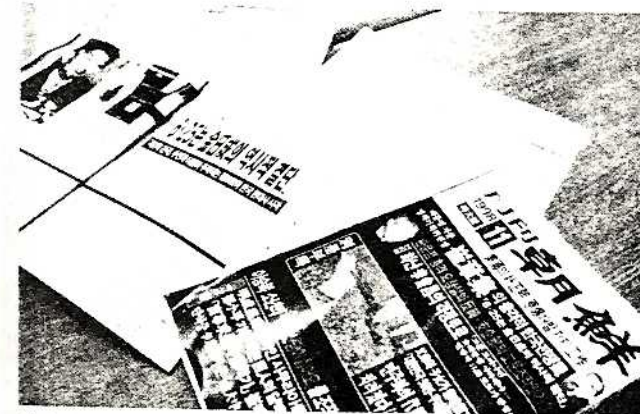
특히 막강한 전파력과 영향력을 갖는 언론은 그런 원칙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정도를 벗어나 허위사실을 전파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표현하는 것은 언론의 검증기능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허위왜곡보도로 인하여 공인일지라도 개인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많은 명예훼손 판례들은 허위왜곡보도에 대하여 맹목적인 언론자유 의 이익보다는 국가법익이나 사회법익, 개인법익이 우선되어야 함을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조선일보 사태의 본질이고 문제해결을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더욱이 월간조선의 문제된 기사내용은 사소하고 주변적인 사항이 아니라 그 동안 조선일보 보도에서 공방의 핵심쟁점으로 부각된 사항이다. 또한 월간조선의 기사내용은 발행주기가 월간인 점을 고려한다면, 어떤 표현상의 사소한 실수나 마감시간에 쫓긴 표현이 결코 아니다. 충분히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음에도 허위왜곡되어 보도된 기사는 어쩌면 미필적 고의를 넘어선 의도적인 고의가 있었지 않나 하는 의문도 든다.

셋째, 조선일보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마치 언론의 비판기능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킨 것으로 선전하는 것은 잘못된 확대해석이다. 마치 후속적인 논의 자체나 보도 자체를 막은 것처럼 오인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장집 교수를 사상검증한 '월간조선', 11월호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문

가처분 결정은 침해행위가 있을 염려가 있거나 계속 진행되고 있을 경우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명령이다. 즉 「문제된 기사내용」이 계속 다른 방식으로 전파된다면 피해자의 명예권을 더욱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문제된 기사내용」만의 보도를 잠정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실제로 법원의 결정 뒤에도 조선일보가 최교수 문제를 계속 보도하여 논쟁을 계속 유도하고

있는 현실은 오히려 자신의 주장과 이율배반적이지 않는가?

나는 조선일보 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와 언론이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지극히 단순하고 단세포적인 속성과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조선일보의 돌출적인 사상논쟁을 통하여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 한가지 문제점이며, 그리고 허위왜곡보도가 개인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언론 자유라는 꺾질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릇된 인식과 공감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문제점이다.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원회는

조선일보 안보기 운동

조선일보 취재, 인터뷰, 기고 거부 운동

조선일보에 광고 안심기 운동

조선일보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을 통해 조선일보의 정상화와 건전한 여론 형성을 이루고자 합니다.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들고 통일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왜곡보도,

까다로운 독자들이

막아냅니다

공대위 활동에 힘을 보태주시시오. 구좌번호 외환은행 189-18-15701-4 성유보(조선공대위)

주소 (121-714)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7층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내) 전화 3273-1529

<제2부>

역대 기사로 본 조선일보가 걸어온 길

社説

學生中의 暴動

諸君

...인생의 길... (Introductory text in vertical columns)

少年의 男女學生... (Main body text discussing student movements and social issues)

...의 暴動... (Continuation of the editorial text)

▶ 1930. 1. 12일자 사실 『동요중의 학생계급- 책상앞으로 돌아가라』
 광주학생사건을 보며 조선일보는 학생들에게 매일 운동을 중단하고
 학원으로 돌아갈 것을 종용하고 있다.

天皇陛下還幸途中

鹵簿에 爆彈 投擲

八日午前東京警視廳前에서

御料車別無異狀

【東京八日午後六時十五分發至急報】午後十一時三十分延着... (Detailed report of the incident and the emperor's safety)

犯人은 京城 出生 李奉昌

現場에서 即時 逮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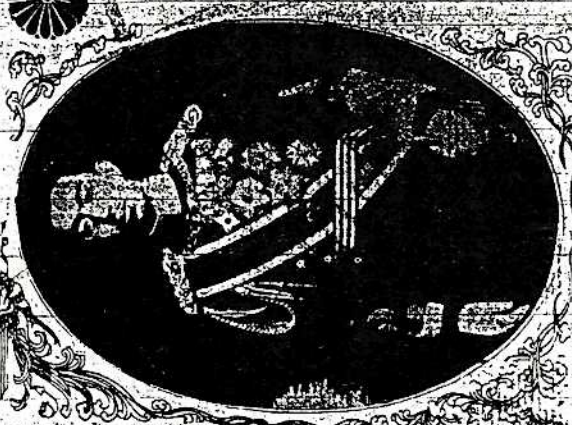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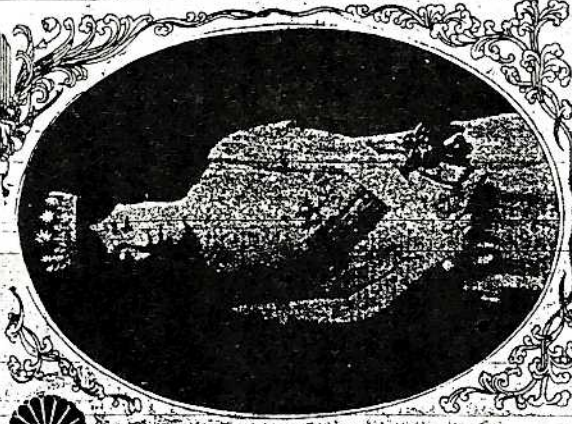
犯人은 京師 서시차사순사(石森巡査)의 視察 當이 官廳에서 체포하여... (Report on the arrest of the perpetrator, Lee Bongchang)

▶ 1932. 1. 20일자 『천황폐하 환행도중 돌연 폭탄투척』 제하의 기사
 이봉창 의사의 폭탄투척 사건을 다루는 기사를 조선일보는 이봉창이라
 는 한국인출신의 범인의 폭탄테러에도 불구하고 천황폐하께서는 천만다
 행히도 무사하시었다라고 쓰고 있다.



元旦・宮中의 御儀

Text describing the New Year's ceremonies at the palace, including the King's New Year's message and the traditional rituals.



朝鮮使命重大

覺悟를 새롭게 하라

朝鮮總督 南次郎

Text of the speech or message from the Japanese Governor-General, Naito Siro, regarding the mission in Korea.

Continuation of the text from the 'New Year's Ceremonies' section.

Continuation of the text from the 'New Year's Ceremonies'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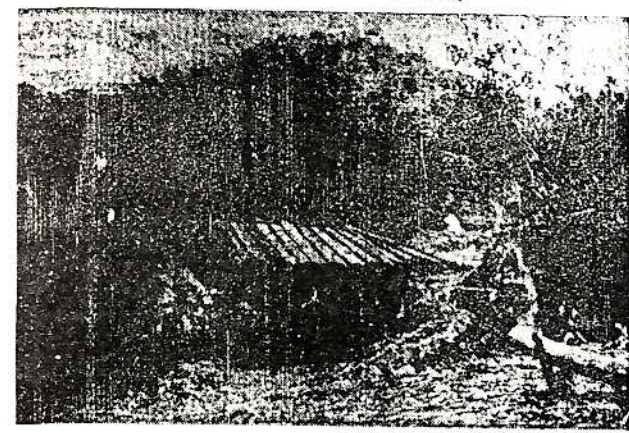
Continuation of the text from the 'New Year's Ceremonies' section.

Continuation of the text from the 'New Year's Ceremonies' section.

Vertical text columns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likely news or commentary.

一家4名을 慘殺

共産黨이 싫어요
어린애들 힘입어서



아군수여자가 반미들이 던진 폭탄을 피하고 있다. [盧炳烈記者의 實況·지미 安情·中文 吳宗壽]

北傀運반발하자 4男妹 등 돌로 짓이겨
칼맞은家長, 2달달려 申告



관비의 남친인 명숙 씨가 관비와 사별한 뒤 관비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盧炳烈記者의 實況·지미 安情·中文 吳宗壽]

Main body of text for the article 'A Family of 4 Members Brutally Murdered', detailing the incident and the political context.

Continuation of the article text.

▶ 68년 12월 11일, 반공 신화인 이승복 신화를 최초로 창조한 보도,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쓴 작문기사의 대표작

▶ 1936. 1월 1일자 1면, '천황' 히로히토 부부 초상화
당시 조선신문으로는 최초로 새해 첫날 신문 1면에 일왕부부의 초상을
대문짝만하게 실기 시작했다.

歷史의 出帆

— 維新憲法案 確定的 意義와 評價 —

社說

維新憲法案의 公布는 國家의 前途에 對하여 重大한 意義를 具有한다. 이 憲法는 國家의 民主主義를 確立하고, 國民의 權利와 自由를 保障하며, 國家의 統一과 發展을 促進하는 爲에 制定된 것이다. 이 憲法는 國家의 前途에 對하여 重大한 意義를 具有한다. 이 憲法는 國家의 民主主義를 確立하고, 國民의 權利와 自由를 保障하며, 國家의 統一과 發展을 促進하는 爲에 制定된 것이다.

南北赤事業의 促進을 爲해

南北赤事業의 促進을 爲해는 國家의 統一과 發展에 對하여 重大한 意義를 具有한다. 이 事業은 南北의 赤十字會를 結合하고, 赤十字會의 活動을 促進하는 爲에 制定된 것이다. 이 事業은 南北의 赤十字會를 結合하고, 赤十字會의 活動을 促進하는 爲에 制定된 것이다.

南北赤事業의 促進을 爲해는 國家의 統一과 發展에 對하여 重大한 意義를 具有한다. 이 事業은 南北의 赤十字會를 結合하고, 赤十字會의 活動을 促進하는 爲에 制定된 것이다. 이 事業은 南北의 赤十字會를 結合하고, 赤十字會의 活動을 促進하는 爲에 制定된 것이다.

▶ 72년 11월 23일, 유신찬양의 백미, 북한의 노동신문과 쌍벽을 이룬다.

維新的 改革의 基礎

— 民主主義의 安定과 繁榮을 爲한 憲法 —

社說

維新的 改革의 基礎는 民主主義의 安定과 繁榮을 爲한 憲法에 在한다. 이 憲法는 國家의 民主主義를 確立하고, 國民의 權利와 自由를 保障하며, 國家의 統一과 發展을 促進하는 爲에 制定된 것이다. 이 憲法는 國家의 民主主義를 確立하고, 國民의 權利와 自由를 保障하며, 國家의 統一과 發展을 促進하는 爲에 制定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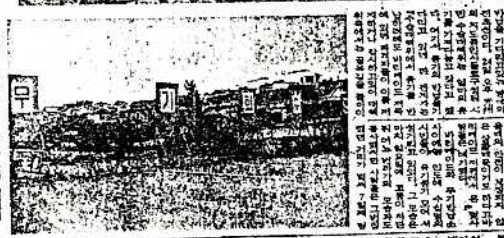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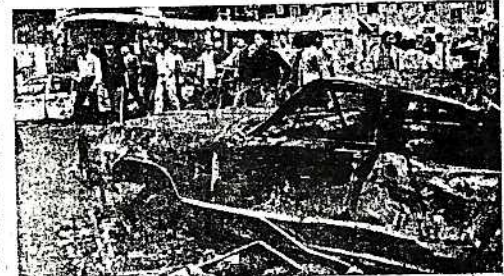
維新的 改革의 基礎는 民主主義의 安定과 繁榮을 爲한 憲法에 在한다. 이 憲法는 國家의 民主主義를 確立하고, 國民의 權利와 自由를 保障하며, 國家의 統一과 發展을 促進하는 爲에 制定된 것이다. 이 憲法는 國家의 民主主義를 確立하고, 國民의 權利와 自由를 保障하며, 國家의 統一과 發展을 促進하는 爲에 制定된 것이다.

維新的 改革의 基礎는 民主主義의 安定과 繁榮을 爲한 憲法에 在한다. 이 憲法는 國家의 民主主義를 確立하고, 國民의 權利와 自由를 保障하며, 國家의 統一과 發展을 促進하는 爲에 制定된 것이다. 이 憲法는 國家의 民主主義를 確立하고, 國民의 權利와 自由를 保障하며, 國家의 統一과 發展을 促進하는 爲에 制定된 것이다.

▶ 72년 10월 28일, 유신헌법은 민주주의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헌법?

바리케이드 너머 텅빈 거리에 不安感만 「無政府 상태 光州」 1週

길목서 저지 武器만 남지엔 市民들 生必需品 동나 苦痛스럽다



【光州 25일 특파원 특보】 光州에서 1주일째 계속되고 있는 무정부 상태는 시민들의 생필품 동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거리엔 바리케이드 너머 텅빈 거리엔 불안감만 남고 있다. 시민들은 생필품을 사기 위해 거리로 나오지만, 거리엔 바리케이드가 세워져 있어 접근이 어렵다. 거리엔 바리케이드 너머 텅빈 거리엔 불안감만 남고 있다. 시민들은 생필품을 사기 위해 거리로 나오지만, 거리엔 바리케이드가 세워져 있어 접근이 어렵다.

▶ 80년 5월 25일, 80년 5월 광주는 조선일보에 따르면, '거리엔 불안감만이 감돌고, 시민들은 생필품이 동나 고통스러웠다.' 이를 폭도들의 탓으로 돌리는 조선일보의 논리는 보는 이를 씁쓸하게 한다.

示威선봉 南派간첩 1명 검거

南海岸침투 光州잠입 못하자 上京 체포순간 毒針自殺기도 환자계동 암수

【서울 25일 특파원 특보】 光州에서 1주일째 계속되고 있는 무정부 상태는 시민들의 생필품 동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거리엔 바리케이드 너머 텅빈 거리엔 불안감만 남고 있다. 시민들은 생필품을 사기 위해 거리로 나오지만, 거리엔 바리케이드가 세워져 있어 접근이 어렵다.

▶ 80년 5월 광주에 대한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감히 광주에 국민적 동포애를 호소하면서 '광주시민 여러분 이제 아무런 위협도, 공포도, 불안도 느끼지 않아도 될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포함한 모든 안전이 철저히 보장되는 조건과 환경의 보호를 받게 됐고 받고 있다'고 하고 있다.

惡夢을 씻고 일어서자

光州에 국민적 同胞애를 호소하면서

光州에서 1주일째 계속되고 있는 무정부 상태는 시민들의 생필품 동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거리엔 바리케이드 너머 텅빈 거리엔 불안감만 남고 있다. 시민들은 생필품을 사기 위해 거리로 나오지만, 거리엔 바리케이드가 세워져 있어 접근이 어렵다.

光州에서 1주일째 계속되고 있는 무정부 상태는 시민들의 생필품 동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거리엔 바리케이드 너머 텅빈 거리엔 불안감만 남고 있다. 시민들은 생필품을 사기 위해 거리로 나오지만, 거리엔 바리케이드가 세워져 있어 접근이 어렵다.

光州에서 1주일째 계속되고 있는 무정부 상태는 시민들의 생필품 동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거리엔 바리케이드 너머 텅빈 거리엔 불안감만 남고 있다. 시민들은 생필품을 사기 위해 거리로 나오지만, 거리엔 바리케이드가 세워져 있어 접근이 어렵다.

80년 5월 28일

戒嚴軍, 光州 장악

戒嚴軍 殉職 2, 부상 1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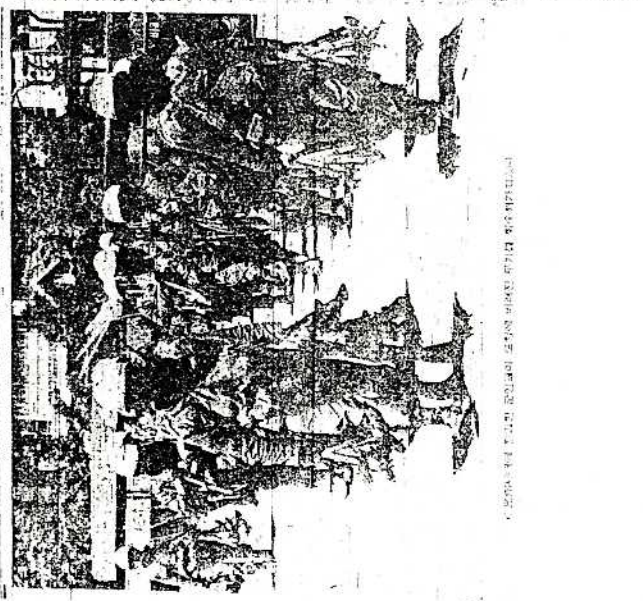
17명 死亡, 2백95명 拘束

戒嚴軍 발효

어제 새벽 電撃 進入

제한에 풀다 市内 출입 잠정 制限

戒嚴軍 발효



戒嚴軍 발효

▶ 80년 5월 28일자, 광주 시내에 진입한 계엄군에 대한 보도, 17명 사망, 2백95명 보호중??

人間 全斗煥

全斗煥의 인간적 면모를 보여주는 기사. 그의 리더십과 인간성에 대해 다룬다.



陸士의 魂이 키워낸 信念과 意志와 行動

私에 앞서 공... 나보다 國家 앞세워
自身에게 엄격하고 責任 회피 안해

利害 관계 얽매이지 않고 남에게 주기 좋아하는 성격
人脈 찾지 않아 주위에 사람 많이 몰려
운동이면 못하는 것 없고 生徒 시절엔 축구부 주장

▶ 80년 8월 23일자, 전두환을 미화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사. '이해관계 얽매이지 않고 남에게 주기 좋아하는 성격'의 '인간 전두환'?

"새歷史 창조에 身命바치겠다"

全斗煥 육군大將 轉役式 어제 西部前線서



○전두환 육군대령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전역식을 마치고 아내와 함께 서울로 돌아왔다. <본지 22일 1면 보도>

平和的 政權 교체 傳統 수립 우리에 알맞는 民主 토착화

【서울 22일 특파원 김현준 기자 특보】 전두환 육군대령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전역식을 마치고 아내와 함께 서울로 돌아왔다. 그는 "새 역사 창조에 목숨 바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우리에게 알맞는 민주 토착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대령은 전역식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나라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힘이다. 나는 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대령은 전역식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나라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힘이다. 나는 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事大·安逸의 舊時代 퇴조는 歷史 발전 順理

전대령은 전역식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나라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힘이다. 나는 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대령은 전역식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나라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힘이다. 나는 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위 엘리트』 交替



○22일에 있었던 전두환 육군대령의 전역식 모습. 새시대의 주역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과위 엘리트들이다.

“選舉 체질” 프로 정치 완전 배제 各界 엘리트 아마추어들 등장

【서울 22일 특파원 김현준 기자 특보】 전두환 육군대령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전역식을 마치고 아내와 함께 서울로 돌아왔다. 그는 "새 역사 창조에 목숨 바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우리에게 알맞는 민주 토착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대령은 전역식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나라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힘이다. 나는 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훌륭한 組織된 軍部 엘리트들
道徳性·誠實性 높고 推進力 강해
막연한 排他心 先入觀 버리고
自主的 民族 세력 實體 인식

▶ 80년 8월 24일자. '새시대의 주역 전두환 장군', '도덕성, 성실성 높은 과위 엘리트' 광주민중화 운동을 진압한 전두환장군?을 미화하는 기사

▶ 80년 8월 23일자, 전두환의 전역식에 대한 조선일보 보도, '권화적 정권 교체 전통수립'이라는 보도속에는 5월과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性的모욕」 없고 폭언·폭행만 했다

검찰, 「富川署 사건」 수사결과 발표



문제의 조사실
 ◀문제의 조사실 모습 (富川署) ▶

운동권, 公權力 무력화 책동 文경장 罷免·署長 등 셋 問責

치안본부, 强圧搜查·감독 소홀 등 이유

“셔츠는 입힌 채 가슴 때려 권양의 誣告 무협의 처리”

仁川地檢부장 一問一答

문제의 조사실 모습 (富川署)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조사실에는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으며, 바닥에는 신문이나 서류가 떨어져 있다. 사진 오른쪽 하단에는 흰색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다.

문제의 조사실 모습 (富川署)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조사실에는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으며, 바닥에는 신문이나 서류가 떨어져 있다. 사진 오른쪽 하단에는 흰색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다.

▶ 86년 7월 18일, 『더이상 부천 성고문 사건을 확대하지 말라!』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 대한 축소조작을 지지하는 보도

▶ 86년 7월 17일자, '권인숙양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 대한 외국 보도, 조 선일보는 정부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보도하면서, "성조차 혁명의 도구" 라는 어이없는 보도를 하였다.

「富川 사건」에서 얻는 것

86년 7월 18일

정부를 포함한 언론과 「富川 사건」에서 얻는 것... 이렇듯, 「富川 사건」은 우리 사회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첫째, 권력 남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둘째,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사회가 힘써야 한다.

이렇듯, 「富川 사건」은 우리 사회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첫째, 권력 남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둘째,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사회가 힘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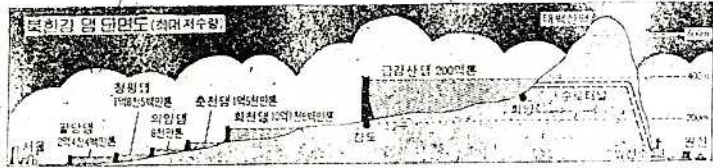
이렇듯, 「富川 사건」은 우리 사회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첫째, 권력 남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둘째,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사회가 힘써야 한다.

이렇듯, 「富川 사건」은 우리 사회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첫째, 권력 남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둘째,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사회가 힘써야 한다.

“金剛山댐 건설 中斷하라”

李圭孝장관 對北성명 통해 강력 촉구

- ◇金剛山댐 규모
- ▲최대 저수량 : 200억 (소양강댐의 7배)
 - ▲댐높이 : 해발 400m (소양강댐의 2배)
 - ▲댐길이 : 1,100m (2배)
 - ▲장벽 길이 : 2,200m (소양강댐은 2,703m)
 - ▲댐형식 : 뿔, 자갈채 만든 砂礫堤 (소양강댐도 사리댐)
 - ▲댐건설비 : 1조4천억원 추정 (소양강댐 건설비는 5천4백74억원)
 - ▲수용면적 : 310km² (소양강댐은 664km²)
 - ▲장벽에 서울까지 도착하는 시간 : 20시간 추정
 - ▲호수후 붕괴될때의 파급효과 : 초당 230만t / 1초(84년 한강홍수 때의 80배수량)
 - ▲발전설비 : 80만kw (소양강댐 발전설비의 4배)
 - ▲발전방식 : 流電 발전식



○李圭孝장관

北漢江 生態 파괴 用水難 초래 무너지면 中部·首都圈 폐허화

국제慣例 무시한 처사... 거부하면 對策강구

【서울 31일 특파원 특보】북한이 남한에 대해 제기한 금강산댐 건설 중단을 위한 성명서와 관련하여, 환경부 장관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제기한 성명서는 국제慣例를 무시한 처사이며, 거부하면 對策강구”라고 밝혔다. 장관은 “북한이 제기한 성명서는 국제慣例를 무시한 처사이며, 거부하면 對策강구”라고 밝혔다. 장관은 “북한이 제기한 성명서는 국제慣例를 무시한 처사이며, 거부하면 對策강구”라고 밝혔다.

【北平 31일 특파원 특보】북한이 남한에 대해 제기한 금강산댐 건설 중단을 위한 성명서와 관련하여, 환경부 장관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제기한 성명서는 국제慣例를 무시한 처사이며, 거부하면 對策강구”라고 밝혔다.

社說

可恐할 金剛山댐

—以毒制毒의 적극적 대응책을—

【서울 31일 특파원 특보】북한이 남한에 대해 제기한 금강산댐 건설 중단을 위한 성명서와 관련하여, 환경부 장관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제기한 성명서는 국제慣例를 무시한 처사이며, 거부하면 對策강구”라고 밝혔다. 장관은 “북한이 제기한 성명서는 국제慣例를 무시한 처사이며, 거부하면 對策강구”라고 밝혔다.

【北平 31일 특파원 특보】북한이 남한에 대해 제기한 금강산댐 건설 중단을 위한 성명서와 관련하여, 환경부 장관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제기한 성명서는 국제慣例를 무시한 처사이며, 거부하면 對策강구”라고 밝혔다.

▶ 86. 10.31 북의 금강산댐 건설에 대한 과장 왜곡 보도, 또다시 레드콤플렉스를 자극하다.

▶ 86. 10. 31 레드 콤플렉스는 조선일보의 영원한 무기이다.

오늘도 전국 「示威 먹구름」

50여개 지역서 집회 계획

勞學연대속 59개大同맹休業

全勞協등 4백50개 사업장 罷業키로



全民聯간부 焚身자살

서강대 박홍총장 신상탄약 투신
 서강대 박홍총장은 92년 5월 9일 오후 10시 30분경 서강대 교정에서 신상탄약 투신 자살을 기도했다. 박총장은 이날 오후 11시 30분경 서울 서대문구 서강대 교정에서 신상탄약 투신 자살을 기도했다. 박총장은 이날 오후 11시 30분경 서울 서대문구 서강대 교정에서 신상탄약 투신 자살을 기도했다.



都心 집회不容

시위지역 출입 자체 해명부

경찰은 서울 시내 중심부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시위지역 출입 자체 해명부는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焚身현장 2~3명 있었다

검찰,自殺방조여부 조사

경찰은 박홍총장의 자살 현장에서 2~3명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자살 방조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92. 5. 9. 91년 5월의 시위보도와 함께 전 서강대 박홍총장의 '죽음 선 동세력있다'는 주장과 검찰의 자살방조여부 조사착수 보도

“죽음 선동하는 세력 있다”

서강대 박홍 총장 실상 반드시 폭로해야

박홍총장은 '죽음 선동하는 세력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社說

학부모범의 우려

학부모범의 우려는 교육계의 심각한 문제를 시사한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학업 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89년 5.26. 전교조를 좌경의식화된 교사들의 집단으로 매도한 사실

학교가 싸움판 안되야

—학생들의 정권의 기쁨—

학교가 싸움판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정권의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 89년 5월 30일, '전교조의 민중 교육론이 인간성 교육을 도의시한 편향된 사상교육이며 비인간화를 조장하는 살벌한 비판의식 교육이라고 힐난하기도 모른다?' 과연 이렇게 주장하는 자가 누구인가? '혹시 조선일보의 속마음이 아닐까?'

이러한 주장들은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성을 함양하는 교육을 지향해야 합니다.

가장 부적절한 과업

철도와 서울부산 지하철의 공동 과업을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金機協과 金地協의 지도부는 아마도 가장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투쟁방식을 선택함으로써 그들이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소속 회원들의 권익조차 제대로 지킬 수 없을지 배우의 신스이다. 가장 큰 이유는 이번의 공동과업 기도가 노동운동의 성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칼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다다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金機協의 방식과 유사한 공동투쟁이나 연대과업 형태의 노동투쟁 방식은 현재의 경제발전 단계나 국제적 상황 변화에 비추어 사회적 제적으로 수용되기 어렵음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건전하고 발전적인 노동운동의 성숙을 저해하고, 산업화 초기단계의 원시적 갈등구조로 되돌아가게 만들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런 우려는 착란에 범어지고 있는 노동계 일각의 새로운 이념화 추세에 비추어 반드시 기우로 들리기 어려우며,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노동계가 심각하고 치지하게 추구해 봐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이런 노동운동의 과잉화를 주도하는 조직들이 대부분 실정법상 보호받기 어려운 法外조직들이고 이들의 투쟁방식도 원천적인 불법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공권력의 강력한 대응을 자중할 것은 불가피하다. 이런

에 건되는 상황을 굳이 부활한다면 이들의 지도노선은 조합원의 권익을 병자한 정치투쟁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계층에는 기성노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노동계의 불일치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노동계의 지도부와 공익기관 정부 등의 공동노력으로 노동계의 화합과 발전방향을 모색해 감으로써 점진적으로 해소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같은 노동운동의 헤게모니를 불모로 삼는 부합한 투쟁까지 발사하는 상황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적 정파의 불명확 판단과 기준이 시되어야 할 것이다.

▶94. 6. 17. 전지협과 전기협의 연대투쟁을 범의단체와의 연계 통한 노동운동의 이념화, 과격화라 묻아붙여 문제의 해결보다는 파국공포증을 부추긴 가장 '부적절한 사실'

▶ 92. 11. 28. 92년 대선을 앞두고 김영삼대통령만들기를 화끈하게 보여준 류근일칼럼, 선거서의 특정후보 지지를 앞장서서 대한 조선일보가 이렇게 앞뒤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관계가름한 뇌관

이런 선전의 표본인 鄭周永의 뇌관... 「대한」은 이 선전의 표본인 鄭周永의 뇌관을... 「대한」은 이 선전의 표본인 鄭周永의 뇌관을...



정말이론 내부로부터 나오는 것... 「대한」은 이 선전의 표본인 鄭周永의 뇌관을...

鄭周永 변수

면 「대한」은 이 선전의 표본인 鄭周永의 뇌관을... 「대한」은 이 선전의 표본인 鄭周永의 뇌관을...

이런 선전의 표본인 鄭周永의 뇌관을... 「대한」은 이 선전의 표본인 鄭周永의 뇌관을...

모순-당착 따져보기... 「대한」은 이 선전의 표본인 鄭周永의 뇌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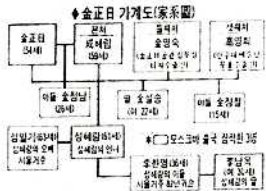
金正日 후처들이 괴롭게 결행



◇스위스법장의 成씨어머니
스위스 법장 내부, 사진속의 여자는 成惠琳의 어머니 成惠琳(1994년 사진)이다. 이 사진은 성씨들이 모스크바 코소보에서 사탕의 모방 상품거래에 관여하고 있다.

平壤서 설치고 1월말에 돌아와 감행
“金の새째妻 高영희가 날 못살게 했다”
94년 모친사망 서울오빠 만난후 결심

成惠琳의 모스크바탈출서 스위스잡적까지



成惠琳의 모스크바탈출... 스위스잡적까지

現妻 高영희는 「기쁨조」 출신
둘째는 집무실타자수 金영숙

金日成 後妻

金正日本은처 西方탈출

成惠琳, 어머니母女-수행원 함께

모스크바 거주중... 스위스서 잠적
어머니, 귀순한 아들과 수차례 국제전화
제3국에 망명 타진 가능성



◇어니成惠琳씨의 의아를
어니에 귀순한 韓惠琳씨, 成惠琳 본씨의 어머니 成惠琳씨의 의아를 이다.

성씨들이 모스크바에서... 스위스잡적까지

▶ 96. 2. 13 근거없는 정보를 안보상업주의에 이용해 먹은 대표적 사례, 김정은 처 성혜림 서방탈출사건 오보

▶ 96. 2. 13. '김정일 후처들'이라는 선정적 내용을 부각시킨 김정일 처 성혜림 서방탈출사건 오보

탈출 金正日 妻 "신변안전"

정부 「成씨一家대책반」 유럽 급파 확인



탈출 前제 3國 망명 타진
韓國 行희망 맨수용

양측 메시지 작년 10월 첫 「홍콩 접촉」
10만 달러 반지 시계 등 선물 교환

성혜림 씨의 평양 생활
관객 기사 21343839면

▶ 96. 2. 14, 김정일 처 성혜림 서방탈출사건

金正日 여성편력에 가슴앓이

금과 결혼 후도 잠시 배우 생활 후처 등쌀에 언니와 외국 여행

아들 정남은 26세... 최근에는 해외 활동 나서

成惠琳의 평양 생활

金正日 처 西方탈출

성혜림(成惠琳)은 김정일(金正日)의 처로 알려진 여배우이다. 그녀는 1970년대 평양에서 배우 생활을 하다가 1980년대 초에 김정일과 만나게 되었다. 김정일은 그녀를 통해 북한 정권을 탈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현재 외국에서 살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 활동을 하고 있다.

경남 창녕태생... 서울서 유년생활
부친 成有慶씨는 남로당 자금책

성혜림의 첫 남편은 김성일(金成日)이었다. 김성일은 남로당 자금책으로 알려져 있다. 성혜림은 1970년대 평양에서 배우 생활을 하다가 1980년대 초에 김정일과 만나게 되었다. 김정일은 그녀를 통해 북한 정권을 탈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현재 외국에서 살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 활동을 하고 있다.

▶ 96. 2. 14, 성혜림 서방탈출사건 보도

"枯死작전"... "결사항전" 끝이 안보이다



◇반면 왜-출입통제
경남 창원대 학생들은 20일 오전 10시 30분경 창원대 교문에서 경찰의 단속을 받는다. (좌측 상단)

◇해산구가 실종
경남 창원대 학생들은 20일 오전 10시 30분경 창원대 교문에서 경찰의 단속을 받는다. (우측 상단)

한총련 사태

쇠몽둥이 공격·게릴라戰術 "새양상" 연행·구속 등 건국·동의 대사태 버금

경찰 斷電·斷水까지 검토... 학교측 반대로 유보

【서울 20일 특파원 특보】 20일 오전 10시 30분경 경남 창원대 교문에서 경찰의 단속을 받는다. (좌측 상단)

【서울 20일 특파원 특보】 20일 오전 10시 30분경 경남 창원대 교문에서 경찰의 단속을 받는다. (우측 상단)

한총련 사태가 20일 오전 10시 30분경 경남 창원대 교문에서 경찰의 단속을 받는다. (좌측 상단)

한총련 사태가 20일 오전 10시 30분경 경남 창원대 교문에서 경찰의 단속을 받는다. (우측 상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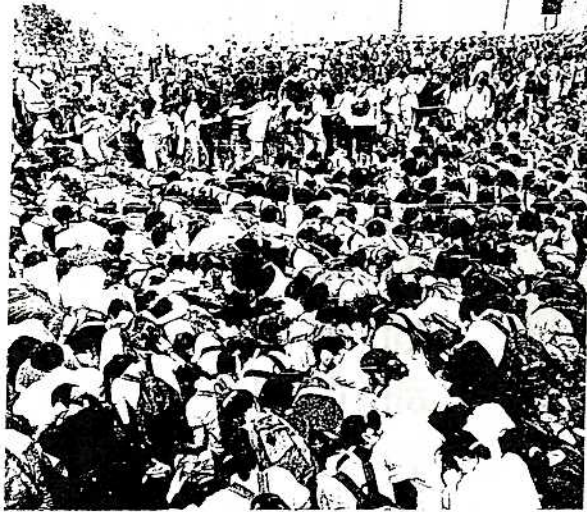
▶ 96. 8. 19 연세대사태를 중간결산하는 보도

폭력시위 할권 연세대는 "폐허"

어떻게 이럴수가...

정문칸테없고...백양로 나무검게 타

강의실 성한 유리창 한곳없어 종합관 어학실스틸빌 장비 "박살"



◇불잡힌 「한총련」
20일 오전 연세대 종합관 옥상에서 경찰에 붙잡힌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고개를 숙인채 앉아 있다. <출처: 뉴스1>

한총련사태不容 국민합의 계기로

연세대 교수총회
국민합의 계기로

한총련 사태不容
국민합의 계기로

▶ 96. 8. 21 학생운동의 폭력성을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朝鮮日報

黃長燁씨 "빅극 다가온다" 전쟁경고

“설마 전쟁일이 키라” 방심하면 민족의 죄인

黃씨는 문「조선문제」단독인수



黃長燁씨

“北 핵·화학·로켓 무기로 남한 초토화 할수있다”

북한이 핵·화학·로켓 무기로 남한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 황장열 씨의 발언이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황씨는 문「조선문제」단독인수를 맡고 있다.

▶ 97년 4. 22. 황장열 논문을 인용, 기사를 통해, 정부의 나진-선봉 지구 투자를 비판하며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연세대 과학관 정지환 채 투영을 저술하고 있다. 「조선문제」단독인수 맡고 있다. 「조선문제」단독인수 맡고 있다. 「조선문제」단독인수 맡고 있다.

「엄마」작전 (연) 동산으로 탐험한 전위사 집단만 지어 제 원 갑작스런 엄마만 있었지, 그리고 남의 학보를 쓸 때 발이 꼬여 국기노릇을 위한 자들의 절충자로 자수라도 할 생각은 하지 않았으며, 건장한 몸이었다.

마치 경찰활동에 있는 것처럼 뒷머리 자는 것이다. 그리고 동생과 대지의 장 위변행위(自變)가(거부) 때문이 아니라 정열의 「카탈리스트」 불체 때문이든, 사실을 왜곡하기 위한 것이다. 자기들이 친 보편성을 한 것은 권력은 권력이다. 권력은 권력이다.

▶ 97년 8월 20일자 사설, 연세대에서의 범민족대회에서 봉쇄당한 대학생들에 대한 조선일보의 사설

외국언론 “한국경제 비관” 정부 “왜곡이다” 강력대응

美 Bloomberg통신과 아시아 WSJ에 정부서 유감 전달

정부는 최근 한국경제에 관한 외국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아 해외에서 한국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판단, 문체 언론사에 항의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 시작했다.

미국 「월 스트리트 저널」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며칠간 한국경제 진단 기사를 잇따라 게재하면서 한국 정부가 경제 위기에 잘못 대응,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 Bloomberg통신은 지난 5일 서울발 기사를 통해 「한국의 금융위기는 태국보다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며, 금융 기관 부실여성이 급증해 도산사태가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다음날 세계적 신문인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뉴욕, 파리, 런던, 홍콩, 도쿄에서 현지인쇄) 1면 1페이지로 실려 한국경제는 엄청난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7일 오후 Bloomberg통신의 빅 오스틴 기사를 한문으로 돌려 기사내용에 사안이 아닌 부분이 많음을 지적하고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한은 이강남 국제담당 이사는 「한국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기초(반디엔류)가 탄탄하고, 외환보유고도 3백억 달러가 넘는다는 등 경제의 기사는 외환보유고가 사실상 대단한 것처럼 묘사하는 등 공정성을 잃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경원 김영숙 국제금융과장은 「항의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사는 정당한 기사를 출판해 스스로에 송고하고 있으나, 유관 데스크에서 때때로 시정문서류 등이 사태를 과장 확대 보도하고 있는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한은은 특히 외환보유고가 1백50억달러로 감소할 가능성은 없다는 내용과 외채 1천1백

억달러 중 8백억달러가 1년내에 만기가 도래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단기외채가 지난 3월말 현재 6백42억달러이며, 9월말 현재 국내 은행의 무수익 예신비율(고정이자 분류어신)은 6.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선투자금은 이날 오후 빅 오스틴 기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접착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아시아 월 스트리트 저널」도 지난 5일 국내 외환 당국의 선출한 매도 개입물량이 20억~22억달러에서 외환보유고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

다. 그러나 한은은 「우려 1백80억달러의 오차폭을 둔 터무니없는 기사」라고 비난했다. 재경원 김만수 차관은 아시아 월 스트리트 저널이 3일부터 연속 한국과 관련된 비판적인 기사란 사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5일부터 뉴욕 월가와 홍콩 금융시장에서는 산업은행이 부도에 직면했다는 루머가 나돌았다. 다들 허자구이체 착오가 종종된 근거없는 루머로 판명됐으나, 산업은행은 해외에서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

부도기업 주식 투자자들 평가손 1조5,792억 추정



동경중시도 하락 7일 신요(三洋)증권 도산 이후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도쿄 주식시장의 평균 주가가 2년4개월만에 1만6천엔선이 무너졌다. 이날 홍콩-도쿄 주가하락의 여파는 한국증시에도 물아되었다. [도쿄=뉴시스]

▶ 97년 11월 8일, 외국언론의 '한국경제 비관' 보도에 대한 조선일보의 반박 보도, 정부와 기업이 왜곡이라며 강경대응을 보이자 이를 성실히? 보도하는 조선일보

블룸버그 보도 요지 한국의 경우 원화 절하로 10월중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나 외채상환 부담 증가와 수입물가 상승으로 수출증대 효과가 상쇄되고 있다. 한국의 외채는 모두 1천1백억달러이며, 그중 1년내에 갚아야 하는 예수는 5백억달러나 된다.

또한 한국이 환율인정 등을 위해 선출시장에서 빌려온 달러는 감안하지 않은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외환보유고는 최저 1백50억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부도기업 주식 투자자들 평가손 1조5,792억 추정

어떤 것으로 나타났나. 이 경우 추정 손실액은 약 1조5천792억 원이다. 이 손실액은 부도가 나거나 부도방지방에 가입되기 직전과 비교할 것. 만약 중상 기업 이 무너지기 훨씬 이전부터 주가가 빠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투자손실액(평가손 포

함)는 더욱 크리라는 분석이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평가손을 기록한 상장사는 기아자동차와 기산. 기아자동차 주가는 7월15일 부도방지방에 가입 직전 1만4천5백원에 현재 7천여원인 폭락, 약 5천3백77억원의 평가손을 기록했다.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것은 금강피혁으로 6월28일 부도 발생 전 주가가 8천2백50원이었으나 지금은 4백원에 불과하다. 같은 날 부도가 난 태성기공은 8천10원에서 5백60원으로 93%정도 떨어졌으며, 1월10일 부도가 난 대영판지는 2만3천원하던 주가가 1천7백원으로 떨어진 상태.

한은-증권원-보감원 "금융감독체계개편 반대"

한국은행,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 금융감독당국이 일제히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7일 한은 관장에서 「한은법 개정 저지를 위한 전직원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이느 한 신문의 참회

▶ 1998년 11월 6일자

솔직한 참회 재탄생 초석으로 정론 벗어났던 일 냉혹히 자성

날카로운 시선·질책 겸허히 수용 절대권력 정당화·비호로 점철

10월유신 지지·군부정권 미화 급급
4·19혁명때 태평로 사육몰타기도

대한매일노사 공동선언문
1998년 11월 6일

대한매일노사 공동선언문은 1998년 11월 6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노조와 기업이 함께 노력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조의 권익을 보호하며, 노사간의 협력을 증진시키자는 취지의 선언문이다. 이 선언문은 노조와 기업이 함께 노력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조의 권익을 보호하며, 노사간의 협력을 증진시키자는 취지의 선언문이다. 이 선언문은 노조와 기업이 함께 노력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조의 권익을 보호하며, 노사간의 협력을 증진시키자는 취지의 선언문이다.

대한매일노사 공동선언문
1998년 11월 6일

대한매일노사 공동선언문은 1998년 11월 6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노조와 기업이 함께 노력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조의 권익을 보호하며, 노사간의 협력을 증진시키자는 취지의 선언문이다. 이 선언문은 노조와 기업이 함께 노력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조의 권익을 보호하며, 노사간의 협력을 증진시키자는 취지의 선언문이다. 이 선언문은 노조와 기업이 함께 노력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조의 권익을 보호하며, 노사간의 협력을 증진시키자는 취지의 선언문이다.

대한매일노사 공동선언문
1998년 11월 6일

대한매일노사 공동선언문은 1998년 11월 6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노조와 기업이 함께 노력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조의 권익을 보호하며, 노사간의 협력을 증진시키자는 취지의 선언문이다. 이 선언문은 노조와 기업이 함께 노력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조의 권익을 보호하며, 노사간의 협력을 증진시키자는 취지의 선언문이다. 이 선언문은 노조와 기업이 함께 노력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조의 권익을 보호하며, 노사간의 협력을 증진시키자는 취지의 선언문이다.

조선일보야말로 자신의 부끄러운 역사를 되돌아보고,
솔직한 사과와 반성을 통해
거듭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인할 수 있는 용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부의 「한겨레경제 매거진」

한겨레신문이 「한겨레경제 매거진」을 창간하는 것은, 경제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독자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매거진은 경제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독자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매거진은 경제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독자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겨레신문이 「한겨레경제 매거진」을 창간하는 것은, 경제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독자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매거진은 경제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독자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매거진은 경제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독자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겨레신문이 「한겨레경제 매거진」을 창간하는 것은, 경제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독자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매거진은 경제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독자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매거진은 경제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독자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겨레신문이 「한겨레경제 매거진」을 창간하는 것은, 경제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독자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매거진은 경제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독자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매거진은 경제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독자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 97년 11. 10. 사설, 외국 언론이 한국경제가 위험하다고 보도하자, 조선 일보는 과장또는 왜곡된 보도라며, 연이어 반박보도를 실었다. 결국 IMF로 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무식함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없었다.

<제3부>

崔章集教授에 대한

조선일보사의 왜곡-음해보도 관련자료

1. 조선일보사의 이념음해 보도 내용
2. 조선일보의 왜곡날조 사례
3. 조선일보 보도 모니터
4. 관련 성명서
5. 관련기사
6. 기타 관련자료

I. 조선일보사의 이념음해 보도 내용

최장집교수에 대한 조선일보사의 이념음해 사건은 10월 19일 발간된 월간조선 11월호가 『6·25는 金日成의 역사적 결단 -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최장집교수의 충격적 6·25전쟁관 연구』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시작되었다. 월간조선은 이같은 섬뜩하고도 선정적인 기사를 통해 최장집교수의 6·25전쟁관이 북한에 유리한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10월 20일자 조선일보 가판은 월간조선에 대한 대대적인 광고와 함께 최교수가 “6·25는 김일성의 위대한 결단”, “6·25는 미국서 남침유도한 것”이라고 서술하였다면서 실제 논문의 내용을 변조하여 기사화하였다. 그럼으로써 최교수에 대한 이념음해는 본격적으로 조선일보 지상으로 확대되었다. 지난 20여일 동안 조선일보는 보도기사, 사설, 칼럼, 만평, 가십, 독자투고 등 모든 지면을 할애하여 최교수를 공격하는 한국의 언론사상 유례없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 아예 취재기자의 이름도 기재하지 않는 기획 기사를 게재하는 등 저널리즘의 기본윤리도 지키지 않는 비상식을 서슴치 않았다.

나아가 10월 22일 SBS 라디오의 『라디오 칼럼』에서는 월간조선의 조갑제 편집장이 출현하여 25분에 걸쳐 최교수에 대해 악의적 이념음해를 함으로써 조선일보의 이념음해는 신문 뿐만 아니라 방송으로도 확대되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때 조갑제의 칼럼내용이 10월 23일 조선일보측이 “金日成의 남침전쟁이 어찌하여 민족해방전쟁인가”라는 제목으로 A4 용지 18쪽에 이르는 장문의 문서를 언론기관에 회람한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내용은 10월 24일자 조선일보에서 취재기자의 이름도 없는 기사를 1면과 2면의 전면면에 걸쳐 보도되었다. 이것은 최교수에 대한 이념음해가 월간조선의 무모한 한 기자의 만용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의 전사적인 의도된 행위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연일 계속된 일간지 조선일보의 보도행태, 10월 28일 SBS 『라디오 칼럼』에서 조갑제의 2차 이념음해, 11월 5일자 주간조선에서의 이념음해 등은 이런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첫째 조선일보측의 이념음해 행위를 그대로 인용하여 살펴보고, 둘째 조선일보측의 주장이 최교수의 논문을 어떻게 변조하였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 이념음해 내용 인용

△ “결론적으로 최위원장은 6·25 전쟁을 평가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에는 불리하게, 북한에 대해선 유리하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난다.”

△ “중공군의 개입을 변호했다”

△ “최장집교수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 잠수정 타고 왔소?”

△ “최위원장의 용어분석 - 일관되고 유기적인 反대한민국적 시각”

△ “이런 용어선택의 논리적 귀결로서 그는 김일성의 남침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단정하여 미제의 식민지인 대한민국을 해방시키기 위한 정의로운 전쟁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최위원장은 일관되게 대한민국 건국의 자주적인 의미를 부정하고 한국전에서 싸운 국군의 역할을 무시함으로써 한국이 미제의 식민지라는 북한의 대남인식에 매우 가까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 “이제 최위원장이 답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이 ‘민족해방전쟁론’이 북한의 시각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것임을 알고 그러한 것인가 하는 의문에 대한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 “대한민국과 국군이 6.25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논리는 또 대한민국과 국군이 미국의 식민지이고 괴뢰라는 북한식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민족해방전쟁론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부인하는 논리입니다.”

△ “국제사회에서 범죄행위로 규탄받은 침략행위를 ‘중공으로서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변호해 주는 말이 그 침략을 당한 대한민국의 국민 입에서 나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 “수백만의 인명을 앗아간 계기를 만든 김일성의 남침에 대하여 역사적 결단이란 말을 대한민국 국민, 그것도 배웠다는 사람이 감히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 “얼마나 북한측을 편들어야 하나.”

△ “어느 정도로 북한편을 들어야 ‘북한에게 유리하게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이 됩니까.”

△ “말로는 냉전적 시각과 수정주의적 시각을 극복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수정주의 이론보다 더 친북적이고 좌파적인 것입니다.”

△ “전쟁의 책임중 상당부분을 남한측에 넘기고 있습니다.”

△ “북한 지도부의 시각을 인용하면서 동시에 그 해석에 동조하고 있는 표현법입니다.”

△ “한국전쟁의 발발 책임자인 북한을 침략자라고 표현하면서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였는지 해명하여야 할 것입니다.....‘침략자’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논리대로라면, 북한을 침략자라고 규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조차 인정하는 않는

다는 의미에서 침략자에 작은 따옴표를 한 것인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 “또 대한민국과 국군이 미국의 식민지이고 괴뢰라는 북한식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는 민족해방전쟁론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부인하는 논리입니다.”

△ “북한이 제국주의자의 압제를 받는 식민지 남한을 해방하기 위한 의로운 전쟁을 일으켰다는 논리를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6.25를 민족해방전쟁이라고 한다면 6.25를 일으킨 세력은 면죄부를 받게 되고 대한민국은 미제의 식민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태를 야기합니다. 용어가 얼마나 무서운 의미를 띠고 있는지 이 경우에 여실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 “저서와 논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오히려.....수정주의의 시각보다 더 좌로 편향된, 때로는 친북적인 전쟁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균형있는 학자적 양심이라 보기 힘들 것입니다. 해석의 자유가 사실 재구성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역사와 사회에 대한 접근에서 출발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 “일관되게 대한민국 건국의 자주적인 의미를 부정하고 한국전에서 싸운 국군의 역할을 무시함으로써 한국이 미제의 식민지라는 북한의 대남인식에 매우 가까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II. 월간조선의 왜곡·날조 사례

월간조선은 이번 사태의 공방과정에서 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한국의 정치학을 대표하는 중견학자의 글을 편집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원문을 가급적 그대로 인용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다음의 자료들은 취재기자의 예단과 신문사의 편협한 시각에서 이번 사건이 비롯되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월간조선은 선정적 제목(「6·25는 金日成의 역사적 결단」,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 崔章集 교수의 충격적 6·25전쟁觀」)을 통해 최고수가 마치 김일성의 전쟁 결정을 미화 혹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같은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전체 맥락과 상관없는, 때로는 논지에 반하는 일부 문장이나 표현의 작위적 발췌를 통해 저자에게 김일성주의자나 친북주의자의 혐의를 씌우고 있다. 이는 한국전쟁과 분단의 고착화 과정을 총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던 필자의 순수한 집필동기를 의도적으로 유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권리인 학문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인 것이다.

1. 날조의 사례

□ 편견이 부른 오보: 위대한 결단

10월 21일자 조선일보(가판)는 최고수가 '6·25를 위대한 결단'으로 주장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원문 어디에도 실려있지 않은 이러한 날조가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했는지 다음 날 신문에는 기사 자체를 빼 버리는 영민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원문에서 언급된 역사적 결단이 결코 긍정적 가치를 내재한 위대한 결단과 동일한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 누락된 '오판'과 터무니없이 강조된 '역사적 결단'

월간조선은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이라는 표현을 제목과 본문 내용에 걸쳐 수차례 반복함으로써 마치 필자가 북한의 전쟁도발을 역사적으로 위대하고 좋은 것으로 미화한 양 무책임한 음해를 가하고 있다.

필자가 '역사적 결단'이라는 표현을 "역사에 오래 남을 만하게 중요한 일을 딱 잘라 결정함"이라는 국어사전적 의미(『옛센스 국어사전』, 민중서림 1990)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월간조선이 고의로 누락시킨 이어지는 글을 보면 단번에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김일성의 오판을 유도하였던 요소는 한반도의 국내정치적 조건이라기보다는 국제정치적 조건, 즉 급속하게 변하고 있었던 냉전체제의 성격과 그 속에서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미국의 힘이었다. 국제정치와 전후 국가체제의 성격을 이해하는 시야의 협애함이라는 면에서 김일성과 박헌영은 약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이 세계정치의 주변지역에서 투쟁하던 민족해방운동에서 벗어나자마자, 국제정치적 변화에 대응하는 학습기간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과 세계정치의 중심에서 직접 대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들 스스로에게나 한민족 전체에게 비극이 아닐 수 없었다”<76면>

다음의 언급들은 필자가 문제의 구절을 한국전쟁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파장을 강조하기 위한 객관적 의미로 사용한 것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의미있는 역사는 언제나 과거가 아니라 ‘현대’라고 했지만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만큼 ‘현재의 역사’인 것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중략-- 우리는 민족사의 전개에 전쟁이 남긴 심대한 영향과 깊은 상처의 의미까지를 외면할 수는 없다.”(『한국전쟁 연구』, 편자 서문 1면)

“한국전쟁이 바로 그 전장이었던 남북한의 역사와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인가는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 영향은 수 세대간의 일제지배의 그것을 능가하는 격변과 파괴를 가져왔다.”(『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78면)

“남과 북을 가릴 것 없이 우리 민족에 집단적 수난을 가져오고 이후 한국사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북한체제와 김일성이 소련 및 중국의 동의 아래 역사적 결정을 내리고 이를 감행한 전쟁 그 자체였다는 사실이다.”(최장집,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의 의미와 평가』, 박명림 저,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권, 508면)

□ 완전한 오독(誤讀): 「北進은 가공할 사태」

월간조선은 남침은 민족 해방전쟁이라는 부제의 단락에서 원문을 인용(210면)하면서 마치 최고수가 친북적 입장에서 38도선으로의 북진을 우려하는 반면 중공군의 개입을 옹호하고 있는 듯이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수의 저서(『한국민주주의의 조

건과 전망』, 이하 원문)에 월간조선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北進은 가공할 사태」라는 표현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의 표는 월간조선이 얼마나 학술적 논문을 부정확하게 인용하고 있으며, 의도적 편집을 통해 사실을 작위적으로 해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표1>

월간조선	원 문
「38도선 이상으로의 北進은 한반도 전체의 초토화를 면치 못할 실로 가공할 사태가 아닐 수 없었으며,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혁명을 수호하지 않으면 안되는 존망의 문제로 나타났다」(208면)	「만약 이 구상(필자주: 확전을 통한 중공 정권의 궤멸)이 실현된다면 그것은 소련의 한국전 참전과 소련군의 서유럽 국가와의 전쟁을 강제하는 3차대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 전체의 초토화를 면치 못할 실로 가공할 사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므로 38도선 이상으로의 북진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차적으로 중국혁명을 수호하지 않으면 안되는 존망의 문제로 나타났던 것이다」(128면)

원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최교수는 북진 그 자체가 ‘가공할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었다. 최교수의 강조점은 동서진영간의 냉전이 점차 심화되어가던 당시의 국제정세상 한국전쟁의 확전이 핵전쟁을 포함한 미·소간의 세계대전으로 비화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초토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에 있었다.

또한, 월간조선은 바로 이 인용구를 통해 필자가 “중공군의 개입을 변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어디에서고 중공군의 개입을 변호한 바가 없다. 위의 표현은 정부 수립 후 갖 1년 밖에 지나지 않았던 중공이 자국의 혁명을 방어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대내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구조적 차원에서든 상황논리에서든 5.16 쿠데타가 발발한 배경을 이론적으로 해명하는 것과 그것이 정당하다는 논리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월간조선은 중공군의 대규모 개입을 가져온 당대의 시대사적 조건에 대한 해명을 정당화 논리와 혼동하는 인식수준의 저열함을 드러내고 있다.

교묘한 바꿔치기: 신탁통치

월간조선은 특유의 교묘한 편집기술을 이용해 「냉전 초기 미소가 합의에 성공한 유일한 사례」(55면)라는 원문의 표현을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안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거의 유일한 사례」(210면)라고 문장을 슬쩍 둔갑시킨 후 필자가 신탁통치를 극찬했다고 왜곡하였다.

한글을 깨친 독자라면 누구나 한 눈에 알 수 있듯이 앞의 원문은 당시의 4개국 신탁통치안이 2차대전 이후 신생독립국 처리를 둘러싸고 미소가 합의에 도달하였던 보기 드문 사례였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월간조선은 이러한 의도적 편집을 통해 임시정부 수립의 유력한 방안으로 미소가 함께 합의하였던 신탁통치안이 전쟁을 통하지 않고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가능한 대안일 수도 있다는 학계의 근간의 해석에 대한 소개를 필자가 극찬한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 아울러, 모스크바 삼상회담과 신탁통치안은 현재도 학문적으로는 그 정당성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현대사의 쟁점 중 하나이다.

상식을 넘어선 말 바꾸기

월간조선은 필자가 한국전쟁을 미제의 식민지로부터 독립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민족해방전쟁으로 규정하였다고 대대적 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이는 필자의 논문을 잘못 독해한 것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민족해방전쟁이라는 표현은 북한 자신이 ‘민족해방전쟁’으로 규정하였다는 의미이지, 필자의 견해가 그러하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월간조선은 다음 고딕체 부분과 인용부호(“)를 의도적으로 생략함으로써 객관적 해설을 주관적 주장으로 변질시켜 놓았다.

“첫번째 시기에서의 전쟁은 전쟁을 유발한 북한 지도부가 기본적으로 믿었던 바의 ‘민족해방전쟁’이었던 반면—”(『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126쪽)

이후 이러한 짜집기식 편집이 문제가 되자 월간조선은 취재 당시 근거로 삼았던 필자의 저서가 아닌 한국전쟁을 다룬 8년전의 아래의 논문을 찾아내놓고는 득의양양하였다.

“첫 번째 시기에서의 전쟁은 기본적으로 민족해방전쟁이었던 반

면..... 두번째 시기부터의 전쟁은..... 민족 내부 모순이 폭발하여 표면화되는 내전일 수가 없게 되었다.”(『한국전쟁 연구』, 336쪽)

그러나 이를 근거로 필자가 한국전쟁을 민족해방전쟁으로 규정하였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오류이다. 첫째, 원문 자체의 의미 유추를 통해 볼 때, 필자는 전쟁의 첫 시기(1950년 6월 25일~6월 27일)의 성격을 국제전과 대립된 의미인 ‘내전’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저자는 전쟁의 전체 성격을 민족해방전쟁이라 규정한 적이 없다. 이 논문의 목적은 전쟁이 내전에서 어떻게 국제전으로 확대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거시역사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했던 것이다. 저자는 사회과학자로서의 관찰자적 입장에서 전쟁을 치렀던 각 국면의 주된 교전 세력이 누구였는가를 밝히고 이를 중심으로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전쟁의 초기국면을 ‘내전’으로, 이후 국면을 ‘내전을 넘어선 것’으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인식에서였으며, ‘전쟁 초기국면’의 성격을 ‘민족해방전쟁’으로 규정한 것도 북한이 전쟁을 시작했고 또한 개전 초기 전황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 당시 북한의 ‘의도’가 사실상 전쟁의 성격을 규정짓고 있었다는 현실주의적이고 객관적인 인식에서였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이 사회과학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정논문에서 “첫 번째 시기에서의 전쟁은 전쟁을 유발한 북한 지도부가 기본적으로 믿었던 바의 ‘민족해방전쟁’이었던”이라고 자신의 논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저자의 연구방법은 ‘객관주의와 현실주의’에 입각한, ‘가치 중립적’인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조선일보는 마치 필자가 북한의 남침을 ‘민족해방전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김일성의 남침결정을 ‘역사적 결단’으로 칭송하였다고 비난하고 있다. 가치중립적인 사회과학자의 연구를 일반인들이 역사를 평가하는 가치개입적 태도와 혼돈하고 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하고 왜곡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 게으른 기자의 오만한 책읽기

월간조선의 지적대로 필자의 저서에서는 계급이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한다. 그러한 용어의 빈도는 월간조선이 문제삼고 있는 ‘한국전쟁’이나 ‘민중’이라는 개념의 빈도를 압도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문제와 더불어 최근까지도 필자의 주된 관심의 영역이다.

박사학위논문의 주제로서 조합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의

관계를 해명하였던 필자가 일생의 탐구주제로 노동의 정치(labour politics)에 변함없는 관심을 갖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필자로선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아뿔튼 월간조선은 필자가 민중이 되기 위한 필수요소로 계급의식을 꼽고 있다고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의 표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주장이야말로 조작(造作)된 것이다.

<표2>

월간조선	원문
<p>< 「정치적, 경제적, 종속적, 역사적 의미가 달라 포괄적이고 역동적이지만 民衆이 되기 위한 필수적 요소는 계급 의식」 이라 밝혔다>(216면)</p>	<p>「따라서 민중은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이다. —중략—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강조되어야 한다. 민중은 포괄적이되 한 가지 필수적인 요소인 중심성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이다. 즉 민중은 위의 네가지 요소 가운데서 첫번째 요소(필자주: 계급의식이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관계와 노동분업 내에서 피지배적 지위에 있는 객관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사회집단, 경제적 수준에서의 민중을 의미)를 반드시 내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점에서 민중은 ‘계급1’(필자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계급)의 내용을 포괄하는 중첩성을 기본 요건으로 한다는 의미이다」(385면)</p>

2. 왜곡: 짜맞추기식 편집

□ 이상한 우연 : 증발된 북한에 대한 비판적 시각

월간조선은 본인의 저서를 인용하는데 있어서 한결같이 전쟁과 분단의 전개과정에 미친 북한의 부정적 영향을 누락시키는 비양심적 방법을 통해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필자의 시각을 친북논리로 매도하고 있다. 이같은 의도적 편집을 통해 월간조선은 “최위원장은 6·25 전쟁을 평가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에는 불리하게, 북한에 대해선 유리하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난다”(212면)는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월간조선이 문제로 삼고 있는 문장이나 구절들에는 우연인지 몰라도 한결같이 북

한에 대한 필자의 비판적 문제제기는 자취를 감추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월간조선의 결론이야말로 필자를 친북 학자로 미리 예단하였던 그들의 치졸한 편견이 도달할 수 있는 당연한 결론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월간조선은 북한에서 사회주의 수립과정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음을 설명하고 있는 원문을 긴 지면을 할애해 장황하게 인용하고 있다(211면). 그리고 이것을 이승만 정권의 정당성 위기를 지적한 부분과 병렬적으로 나열 한 후 북한을 이롭게 해 주는 해석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문에서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음 부분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월간조선의 눈 먼 독해법에 우리는 혀를 내두르지 않을 재간이 없다.

“그러나, 북한의 통일-변혁론이었던 민주기지론은 그 시기가 매우 일러 이미 1945년 해방 직후부터 나온 것이었다. --생략--이 민주기지노선에 의한 혁명론은 북한에 인민정권수립을 목표로 ‘건당’, ‘건국’, ‘건군’을 주창한 것이었는바, 이미 분단을 기정사실로 전제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이 북한의 혁명노선이 미소의 남북한 점령 직후인 1945년 10월을 전후로 한 시기로서 매우 일찍 나타났음을 고려할 때, 이는 미군정령하에서의 남한의 정치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나아가 남한내의 토착공산주의세력과의 긴밀한 연계 없이 북한만의 단독 혁명노선을 수립하고 일사천리로 혁명을 추진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북한지도부의 노선은 뒷날 분단과 전쟁으로 발전하는 민족적 비극의 역사적 책임의 일부를 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74면)

한국현대사에 일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독자라면, 이러한 필자의 지적이 분단정권의 초기수립을 기도하였던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이며, 북한을 이롭게 해 주는 해석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숲대신 나무’만을 보기를 고집하는 월간조선의 기이한 편집증은 한국전쟁의 영향과 피해를 다룬 부분에서도 예외없이 발견된다. 월간조선은 필자가 남쪽의 피해에 대해서는 “민중들은 참담한 피해를 입었지만”이라고 짙막하게 언급한 반면, 북한의 피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점에 대해서 ‘북한에 유리한 논리’라는 이데올로기적 혐의를 덮어 씌우고 있다. 월간조선의 논리대로라면, 히로시마의 원폭피해를 강조하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일일 것이며, 2차 대전 당시 스탈린그라드의 끔찍한 공방전에서 독일군이 입은 엄청난 피해를 연구하는 일 역시 파시즘에 동조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월간조선이 필자가 의도적으로 북한주민들의 피해만을 과장해서 주장한 것처럼 작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월간조선이 무참히 잘라낸 다음의 인용문은 정권과 일반국민들의 이익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필자의 연구방법과 그

것의 논리적 연장으로서 남북한 민중들이 각각의 정권에 비해 얼마나 커다란 피해를 입었는가에 대한 관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는(필자주: 북한민중의 참혹한 피해) 대조적으로 북한에서도 가장 큰 수혜자는 김일성 그 자신이었다. 그를 제외하고는 북한정권을 구성하였던 모든 세력들은 남로당을 필두로 하여 모두 숙청되었고, 북한은 김일성 유일체제를 향하여 치닫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77면)

끝으로, 다음의 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최고수를 친북인사로 내몰기 위해 월간조선이 얼마나 교묘하고 집요하게 짜집기를 하였는지를 전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표3>

월간조선	원 문
「이어지는 글에서 그는<전쟁 초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민군에 가담하거나 북한군의 南進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고 밝혔다」(210면)	「전쟁 초기 북한군이 남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북한통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난길에 올랐지만 동시에 적지않은 사람들이 인민군에 가담하거나 북한군 남진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미군의 개입과 무차별 공격에 따른 전황의 급박한 변화에 따라 점령정책은 더욱 강압적으로 변질되었다. 처음 북한은 토지개혁과 노동법 실시와 같은 사회경제적 개혁 그리고 당조직, 인민위원회, 대중단체의 조직과 참여기구를 확대하면서 전쟁목표의 달성과 남한주민의 지지를 확보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곡의 강제공출, 주민통제가 강화되고 점령말기에는 의용군과 노력대원으로 징발되어 전선으로 강제동원이 수행되었다. 나아가 반혁명분자 또는 친일민족반역자라는 명목으로 많은 주민이 유혈적 처단의 희생물이 되었다. 이러한 점령지역에서의 북한통치는 전후 공산주의 공포증의 확산에 하나의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136면)

□ 학문발전의 족쇄: 흑백논리